

“방송, 미래를 열다”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 열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이 주관하며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협회, DTV KOREA, 미래방송연구회가 후원하는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가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11월 6일과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장에서 열렸다.

최종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송기술 현안은 방송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운을 뗀 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방송정책 전반의 비전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키노트로 참여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방송기술 현안이 방송정책 전반의 현안이라는 최 회장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모든 현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양 위원장은 수신료 문제나 지상파 중간광고, 유료방송 8VSB 허용 및 케이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해 눈길을 끌었다.

11월 6일에는 지상파 스마트 플랫폼 POOQ!(이상술 콘텐츠연합플랫폼 이사), 오디오 코덱의 발전과 디지털 라디오(안영기 CBS 디지털기술국 국장), New MIROS - 라디오 Tapless 제작/송출 시스템(이상규 MBC 기술연구소 차장), UHD-TV 개발과 영상 콘텐츠(김병노 LG전자 TV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사가 진행되었다.

11월 7일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방송 제작 시스템(임종근 SBS TV 기술팀), 미디어 가치 사슬의 변화와 수익화 실현을 위한 개방형 협업 플랫폼-Avid Everywhere(류명수 한국어비드 이사), 빅데이터 기술과 비정형 영상 데이터 분석(박종열 ETRI 분석 SW 연구실 실장), HEVC 기

술 & 서비스 개발 현황(류성걸 픽스트리 연구개발본부장), 증강현실과 방송-어떻게 할 것인가?(송주호 EBS 선임연구원), 구글 TV 사례로 본 스마트 미디어 발전 방향(이건영 LG유플러스 IPTV 서비스팀 팀장), 방송과 통신의 하모니, 세컨드 스크린 최신 기술 동향(이재호 KBS 기술연구소 차장) 강좌가 이어져 큰 호평을 받았다.

컨퍼런스의 백미인 '차세대 UHD-TV 방송과 700MHz 활용 방안 토론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첫째날에 열린 본 토론회는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박진우 KBS 부장, 이남표 MBC 연구위원, 이상진 SBS 박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상진 SBS 박사는 토론회 직전 지상파 방송 4사 UHD 발전 공동안을 담은 '국민행복 700 플랜'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현안을 소주제 형식으로 정리해 진행된 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에 박진우 KBS 부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전 세계적 통신 활용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를 비판하며 “공공재의 경매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또 이상진 SBS 박사는 모바일 트래픽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주파수를 요구하는 통신사를 겨냥해 “모바일 트래픽 부족은 현재 통신사들의 판매 정책을 볼 때 허구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활용을 통해 UHD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주파수를 누가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가려낼 수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 할당설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의 충격적인 지상파 죽이기...후폭풍 예고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박근혜 정부 최초로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전무한데다 지나친 유료방송 중심의 정부 정책과 보편적 공공의 미디어 서비스 말살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기에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계획(안) 발표 이후 “해당 안건은 방통위와 논의된 것이 아니다. 미래부의 안건이다”며 일정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사태는 더욱 꼬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재영 그룹장이 발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은 한 마디로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 고착화와 지상파 방송을 말살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그룹장은 아직 본 계획이 하나의 가능성이며, 정리된 안건은 아니라는 말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인 UHD 방송 정책 추진과 더불어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및 지상파의 무재송신 채널 확대 정책 등을 숨기지 않았다.

발표된 계획(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료방송 권역별 규제 완화에 따른 특혜 논란, 그리고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과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긍정적 검토, 지상파의 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이다. 이 그룹장은 “유료방송의 수평규제 추진 및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상파의 무재송신 채널 확대와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을 해내겠다”고 밝히며 “특히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추진하며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으로 짜여진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의 허점은 상당한 편이다. 우선 계획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모호하게 설정해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계획(안) 구성 단계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철저히 배제해 실질적인 방송산업정책도 부재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대목은 역시 지나친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추진이다. 특히 UHD 발전을 사실상 유료방송에 맡기겠다는 부분은 시청자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 측면과 콘텐츠+플랫폼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론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완벽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일종의 종합편성채널 특혜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방송산업발전에 밀어 넣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본 계획(안)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과 UHD 협의체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논란이 끝나지 않았고, UHD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가 직접 나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사전교감이 있었을 확률도 있지만 공식적인 연구반-협의체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미래부-방통위-문체부의 계획(안) 발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이미 각 부처에 지상파 UHD 발전방향을 정식으로 제출했지만 본 계획(안)에 해당 내용은 철저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추후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성명서]

‘지상파 말살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규탄한다

유료방송 지원을 위한 토론회?

11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방송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상파 방송을 배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 있었다. 게다가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기획 단계부터 지상파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본 토론회의 이름을 유료방송 지원을 위한 토론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8VSB 허용, 긍정적인 검토도 불가하다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계획은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울 지경이다.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정상적인 케이블 MSO 디지털 전환이 아니기에 많은 시청자들을 짝퉁 디지털 전환의 틀에 가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전 계획에 아직 연구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전제했지만, 8VSB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위한 성급한 정책추진을 실시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편의 UHD를 외면하나

본 토론회에서 공개된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도 문제다. 이미 오래전 지상파가 보편의 지상파 UHD 플랫폼 로드맵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발전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UHD 발전도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료방송 사

청자를 위한 혜택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청자는 무료 보편의 시청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흑백 TV시대에서 컬러 TV 서비스로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린 것처럼 지상파의 차세대 UHD-TV 방송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 UHD 발전 주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 계획이 수립된 부분도 의문이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발전 계획의 UHD 전략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은 사기업의 추악한 욕망을 채워주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UHD는 시청자 복지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추구하라

진정한 방송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한류 및 K-POP 콘텐츠 등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론회에서 등장한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다.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통해 어설픈 경제적 낙수효과를 노리지 말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방송정책을 당장 재수립하라.



사설

정부의 지독한 유료방송 사랑, 집착을 버려라

지상파 말살 정책을 저지하라

11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방송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상파 방송을 배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 있었다. 해당 계획은 보편적 시청자 복지를 담보할 최후의 보루인 지상파 방송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추진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방송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판국이다.

공공성을 배제한 유료방송 특혜 논란

이번에 발표된 방송산업발전계획의 문제 중 하나는 방송이 가지는 공공성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방송산업발전에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준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지만 8VSB 허용은 종합편성채널 특혜 및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와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폭탄일 뿐이다. 게다가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철저히 배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방송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고화질 한류 콘텐츠의 발원지인 지상파를 제외하고

콘텐츠의 부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UHDTV, 시청자 복지에서 이해되어야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정책 수립은 어떤가. 콘텐츠와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의 장점을 무시하고 고품질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UHDTV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은 기본적인 방송 플랫폼에 대한 몰이해가 불러온 비극이다. UHDTV는 시청자 복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복지의 차원에서 수립한 UHDTV 발전 모델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UHDTV추진계획안에 지상파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시청자 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를 수 없다. UHDTV는 더욱 많은 시청자를 위해 복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폐기에 가까운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11월 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확정안이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부분별한 유료방송 살리기와 지상파 죽이기로 점철된 부분은 반드시 폐기에 가까운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방송은 공공의 영역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성과 공익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은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다.

채널재배치 종료, 주파수 전쟁 시작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늦어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전라권을 시작으로 진행된 채널재배치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1997년 디지털 TV 방송 전송방식이 결정된 이후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2013년 채널재배치 등 약 16년간 추진돼 온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아직 디지털 전환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유료방송의 진행일정과 비교하면 성공적이고 깔끔한 마무리라는 평이다.

이에 미래부는 “그간 채널재배치에

따라 예상되는 시청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사전 홍보와 신속한 민원응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지원 등을 통해 시청자 지원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히며 노인·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 총 54,874가구에 대한 채널재설정 방문지원을 완료했고 채널변경 대상 공동주택 1,272개 단지를 현장 방문해 공시청 설비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DTV KOREA를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추후 발

에서 공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상파 방송사가 공공성의 측면에서 JTBC 뉴스에도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해당 주파수를 조건없이 할당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KBS 박진우 부장은 “낮은 직접수입률은 문제가 있지만 이를 지상

생활 수 있는 시청자 민원에 대비한 지역별 지원센터도 12월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채널재배치를 기점으로 회수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항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고민하고 있지만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상황은 점점 시계제로 상태로 빠지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정책적 공백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결정이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및 방송광고 등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의 교체까지 겹치면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 중 하나인 방통위의 동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 수립을 목표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략을 열정적으로 짜고 있는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 할당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어 700MHz 대역의 주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파 방송사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는 무리가 많다”며 역으로 정부와의 정책적 공조를 강조했고 이남표 MBC 연구위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 이상진 SBS 박사도 유료방송과의 차이점을 근거로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지상파 3D 방송 시대 열려 3DTV 시장 훈풍불까?

지상파 3D 방송 시대가 열렸다. 영화 〈아바타〉 이후 콘텐츠 부재로 위기에 몰렸던 3DTV 시장이 다시 한 번 3D 열풍을 재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BS는 지난 10일 〈TV 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 지상파 3D 방송의 문을 열었다. SBS 인기 프로그램인 〈런닝맨〉〈수상한 가정부〉〈SBS 인기가요〉등을 3D로 촬영해 옴니버스 편집 형식으로 선보인 〈TV 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는 앞으로 매달 1편씩 총 10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식나눔 콘서트 아 이러브 인(人)〉을 매주 토요일 1편씩 총 5회 선보일 예정이다.

지상파 3D 방송은 지난 6월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미래부에서 고시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적용된 국산 3D 방송 기술인 ‘듀얼 스트림(Dual Stream) 방식’은 2D 영상과 3D 영상 모두를 기존 정규채널 주파수인 6MHz에 압축시킨 기술로 일반 TV에서는 기존과 같이 2D 영상을 시청하고, 3DTV를 보유한 시청자는 3D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3D 방송이 시작되자 그동안 다소 침체되어 있던 3DTV 시장 역시 긴 동면에서 벗어나 꿈을 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SBS의 3D 방송이 3DTV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때 열풍까지 일었던 3DTV가 시장에서 수그러 들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콘텐츠

부족이었던 만큼 지상파 3D 방송으로 콘텐츠가 보강된다면 3DTV 산업 자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3DTV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대감을 표했다.

첫 방송을 무사히 마친 SBS 관계자들도 ‘기대 이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으며 첫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BS 3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 케이블 방송 시청자 등 약 40~50만 명으로 한정돼 이번 기회가 3DTV 시장 자체에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앞서 3D 방송을 시작한 국내 KT스카이라이프와 미국의 ESPN도 3D 방송을 접었기 때문에 SBS의 3D 방송 역시 지속적으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몇몇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에서는 지상파 3D 방송이 3DTV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11월 현재 전 세계 3DTV 보급률이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상파 3D 방송도 시작됐고,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3D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3DTV 산업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반응인 만큼 당분간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언론노조, “파업도 불사한다”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대를 모았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내실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실행행사에 나섰다. 이에 언론노조는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총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추후 대국민 선전전을 포함해 필요하다면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끝모를 추락, 언론 자유의 유린을,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그리고 해직언론인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공전을 거듭하며 종합편성채널 및 다양한 유료방송 특혜(8VSB 포함)가 노골적으로 심화되는 한편, 해직언론인 문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언론노조의 비장한 출사표는 주요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장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하며, 해직언론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강 위원장은 “절대 순항양이

되지 않겠다”며 “이번 총력투쟁이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단언했다.

박석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도 “지금 방송은 정권의 주구, 시녀다”고 꼬집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한 순간이다”고 전제했다. 또 박 대표는 “국정원 부정선거 문제와 공정방송 파제는 반드시 사생활당으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고 말하며 언론노조의 총력투쟁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주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은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현재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낙제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개탄하며 “MBC 사측에게 공정방송을 촉구했더니 언론노조를 탈퇴하라는 말만 들었다. 이제 정서적인 사고방식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작년 MBC 파업 당시 노조가 얻어낸 결과물도 유야무야되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결과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 싸워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유경 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장은 “삼성은 야구 우승했다고 자화자찬하며 근로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고, 정부는 전교조를 노조의 울타리에서 내보내며 대통령은 외국에서 패션쇼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지금은 언론이 싸워야 할 순간이다. 총력투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언론노조의 총력투쟁 선포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직언론인 문제 및 종편 8VSB 허용 논란 등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전국을 돌며 국회 방송공정성

위 소속 위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의견제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BS와 MBC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정권과 보수언론이 던진 구면 전환을 의제를 확산시키며 정권의 구원투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보다 더욱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어 언론계는 가장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총편을 지원하기 위해 8VSB 도입 등을 허용하려 하고 있고, 언론사들은 회사에 순응하는 언론인을 양산하기 위해 앓다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YTN 해직 기자들은 5년이 넘도록, 1863일째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정보도 쟁취를 위해서 1만 2천 언론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며 “전국의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찾아 지역 언론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특위 위원들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의 활동 실상을 알리는 보도 투쟁을 조직화하고,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해 모든 양심 세력과 강고한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 18일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UHD 발전계획에 지상파 방송사가 완전히 배제된 이유가 뭐냐”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서...제일 궁금한 부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21세기형 버전인가?

“발표된 안은 미래부의 것이지 방통위의 것이 아니다”(이경재 방통위 위원장)

☞11월 15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평가하며...조직간 힘겨루기? 아니면 불협화음? 아니면 발 빠기?

미래부, “선의를 피해자 양산 안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끝나는 700MHz 무선 마이크 및 900MHz 무선 전화기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미래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기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11월 17일 “일부 국민이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와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단속을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는 지난달 말로 사용이 중지되었고 900MHz 대역을 활용하는 무선 전화기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용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러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 미래부의 총체적 주파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경우 가까이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멀리서는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과 관련이 많은 만큼 미래부의 무리한 주파수 수급정책이 불러온 일종의 ‘인제’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논란의 경우 2011년 KT의 주파수 정책 실패 및 LTE 서비스와 관련된 혼선, 여기에 무리한 주파수 클리어링 문제까지 겹쳐 상황은 심각하게 꼬이는 중이다. 정부의 무리한 주파수 정책 수습이 불러온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최동환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김주옥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진&홍성프린원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좀비 저널리즘 타파, 이제 행동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종료 임박 긴급 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종료 임박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는 여야합의로 탄생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한편, 언론노조가 11일 천명한 총력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에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제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곡된 언론 시장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진표 방송인총연합회 회장(PD연합회 회장)은 “특위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방송현업인들은 절망적이다”며 “방송인총연합회 차원에서 해직 언론인 복귀를 위한 서명을 실시해도 이를 받아줄 곳이 없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무너진 언론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언론, 방송은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졌다”고 개탄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방송의 공정성은 현 정부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교수는 최근 있었던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그에 대항했던 언론노조의 투쟁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공영방송은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버렸다”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활동종료가 임박한 특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최 교수는 “성공없는 특위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지난 10월 이상민 위원장(민주당)이 1차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여당추천 5명과 야당추천 5명으로 이뤄진 전문 자문단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

위에 보고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심지어 여당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단 한명의 의원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발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이는 여당이 특위활동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 일부를 담당하게 만든 부분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의 방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최근 공영방송 3사 봄-가을 개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최근 김중국 MBC 사장이 노조에게 임금단체협약을 구성하려면 언론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부분을 지적하며 “합법적인 노조의 권리를 방해해도 무방하다는 방송사 사장의 인식은 참담 그 자체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공정방송을 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에 최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에 방송법 제4조 3항에서 방송편성책임자의 과도한 권리를 제한하고 합의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민주적인 제작방식을 도입할 것과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복귀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발제가 종료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더욱 도발적인 주장들이 쏟아졌다. 이에 고삼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언론, 방송환경은 비상식의 일상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절차적,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승례문 단청 보수 작업에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방송의 공공

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지상파 재전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와 지원 등 상당 부분이 새로운 이슈가 아닌, 지난 5~10년 동안 이야기 된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는 논의된 계획(안)은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콘텐츠시장 활성화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가지 세부 추진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지상파 MMS 허용 검토 및 미디어

성에도 전향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재 공영방송은 좀비 저널리즘이다”고 단언하며 “혁명에 준하는 방송 민주주의 운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행해졌던 방송사 낙하산 사장 문제 근절을 주장하며 “YTN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신재민 전 차관의 문서와 속칭 배석규 사장의 총성문서 등 방송사 낙하산 사장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확고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기자는 “2012년 민주당이 방송사 총파업 당시 언론 청문회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 당 지도부가 종편에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만 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YTN의 핵심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이 지난주부터 결국 중지되었다”는 말로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대신했다. 마지막으로 노 기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 사태 해결이 어려운 지경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회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순위는 계속 하락 중”이라며 “뉴스타파 등 대체인론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국민의 힘으로 언론, 방송장악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친일 언론인 백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로 현 정부에서 행해지는 방송장악의 뿌리를 오래된 역사에서 찾으려는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끌었다. 다만 송호창 무소속 국회의원은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무너진 언론, 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하단]

최진홍 rgdsz@kobeta.com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지원 등도 심도깊게 다뤄졌다. 또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P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년 최소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분에 연동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통합 방송법, DCS 허용도 토론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생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T-커머스를 위한 데이터 방송 규제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8VSB, 성급한 케이블 아날로그 종료?

사실상 MMS 하겠다는 것

8VSB에 대한 논란은 11월 14일 KISDI의 공개 토론회를 기점으로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현재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기준으로 60개 채널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17개 채널은 6MHz 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60MHz 대역 주파수가 필요했지만, 미래부는 8VSB 허용을 전제로 6MHz 대역에 HD와 SD 2개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산하면 풀HD 20개, HD 20개, SD 20개 채널을 운용할 때 총 240MHz 대역 주파수가 필요해진다. 기존 주파수 중 120MHz 대역이 남게 되며 이는 케이블 UHD 방송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군소 PP 퇴출 가능성을 의식한 기술적 조치로 보인다. 또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아날로그 TV 보유 가구 300만에게는 무료로 컨버터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정책 로드맵도 허접이 많다. 물론 미래부에서 발표한 확정안이 아니기에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만약 60개 채널 구성을 풀HD 20, HD 20, SD 20으로 묶고 아날로그 TV 가입자에게 컨버터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해도 해당 정

책이 불완전한 디지털 전환의 확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8VSB 허용은 완벽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기점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불완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요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케이블 MSO가 인프라 투자 없이 디지털 전환의 가면을 쓴 짝퉁 디지털 전환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측면에서 해당 사항을 평가하면, 아직 구체적인 법 조항 없이 무단으로 ‘특정 방식의 방송 종료’를 강행한다는 절차적 문제까지 불거진다.

문제는 또 있다. 8VSB 허용으로 300만에 육박하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컨버터를 배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컨버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청권 침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당시에 불거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팀은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

분석

700MHz 주파수 전체가 통신용? 아니다!

애플의 아이폰5, 700MHz에서 겨우 46MHz만 지원

스티브잡스로 대표되는 Apple(애플)의 아이폰5s가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6MHz 폭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과 관련해 FCC가 Band Class(BC) 12 내부의 A블록을 할당받은 군소 통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미국 통신사 업계 1, 2위인 AT&T와 Verizon은 물론 실질적 단말기 제조사인 Apple이 반대하고 나선 사례와 비슷한 결론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주파수의 할당 주체를 모색하는 한편, 그에 따른 논리 전정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를 중심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에 할당되고 있다는 논리도 득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세계적 통신 활용은 실체가 없는 헛된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주파수가 전파적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 나라의 핵심 산업에 활용되는 추세는 있지만, 모든 나라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Apple이 FCC의 법률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커버하는 단말기 제작을 거부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에 Apple이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6MHz 폭만 지원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이러한 논리는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KBS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Apple의 아이폰 5s는 700MHz 대역 주파수 BC 12,13,14,17 중 BC 13과 17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즉 BC 13과 17에 해당되는 46MHz 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서 아이폰

방송공정성특위 이번에도 ‘빈손’(?)

“소속 위원들 제발 좀 성실히 임하라” … 우려 목소리 잇따라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방송공정성특위는 당초 9월 말로 활동을 마치게 되어 있었으나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문제는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 등의 언론단체들은 “방송공정성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여당의 ‘무의지’와 야당의 ‘무능력’이 겹치면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방송공정성특위 소속 위원들의 사무실을 찾아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뿐만 아니라 학계도 방송공정성특위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방송공정성특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공정성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없고,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이 만든 개정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능도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도를 바꿀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해 방송진흥 정책을 맡기고자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했으

5s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전체가 통신에 활용되고 있다는 미래부와 통신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약체)가 밴드플랜 28에서 703~748MHz, 758~803MHz를 통신에 할당하고 TDD를 활용한 밴드플랜 44에서 703~803MHz 전체를 할당했지만 적어도 Apple의 아이폰5s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었다. 밴드 28은 주파수 대역이 맞지 않아서, 밴드 44는 Apple이 TDD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Apple의 아이폰5s는 BC 13과 17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지난 9월 호주의 Optus와 Telstra가 700MHz를 통신에 할당받아 서비스에 돌입하였으나 신형 아이폰5s와 아이폰 5c의 기술사양에는 이 밴드28의 누락으로 700MHz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Apple의 예를 들어볼 때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체 통신 할당은 사실상 신기루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각 나라별로 주파수 수급 상황이 다르고 통신이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Apple이 모든 통신의 전향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700MHz 대역 주파수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해당 주파수의 46MHz 폭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해당 주파수의 전 대역을 통신이 활용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을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힘을 잃어버린 셈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주파수의 ‘총량’이 통신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벗어난 만큼 이미 막대한 주파수를 보유한 통신사들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주장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여야가 6개월 간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해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공정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그런데 현재 방송공정성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공정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표류하고 있는 ‘방송 공정성 개선자문단’의 합의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야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지난 9월 말 여야 추천 언론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몇 가지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KBS와 EBS의 사장 선임 시 이사회 재적의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보도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많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대안 언론이 기성 언론을 자극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참담한 언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역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의 활동 실상을 알리는 보도 투쟁을 조직화하고,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방송공정성특위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4년 KOBETA 슬로건 공모전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KOBETA)는 방송 기술 발전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KOBETA는 “대한민국 방송 기술의 역동적인 미래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슬로건 개발을 통해 2014년 KOBETA의 활동 방향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공모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KOBETA 관계자는 “방송 기술의 미래 외에도 현재 상황에 맞는 방송 기술의 사명과 책임을 담은 문구, 또는 방송 기술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구 등 범위는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로건 접수는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KOBETA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해야 한다.

당선작은 12월 9일 이후 KOBE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3명의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양문석 위원,“주파수는 공익”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에 참석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 기술 현안이 방송정책 전반의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현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양 위원은 수신료 문제나 지상파 중간광고, 유료방송 8VSB 허용 및 케이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이를 사업자 간 문제로만 재단하지 말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양 위원의 발언이 특기할 만했다. 이에 양 위원은 현재 방송과 통신의 주파수 논쟁이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구 방통위 시절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기로 한 부분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파수 정책을 논하기 위함이었다”고 전제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누가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방송도, 통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구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 통신 할당이 방통위원장 시행령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위원은 “2016년 LG유플러스, 2017년 SKT가 2G 주파수를 반납하게 되고 추후 3G 주파수도 정부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파수의 총량을 감안하면 700MHz 대역 주파수에 목을 매는 통신의 접근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주파수를 보유하게 되는 통신사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에 매몰되는 것은 무책임한 이기심의 발로라는 지적이다. 또 양 위원은 현재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양이 방대하다는 전제로 “종합적인 주파수 정책을 가장 공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는 최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반드시 올해 안에 할당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부분과 겹치는 대목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DTV KOREA, 실내안테나 보급

DTV KOREA는 (주)스펙트럼, (주)이노링크, 디지털시청100%재단 등과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실내안테나 보급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난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DTV KOREA는 실내안테나 홍보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하고, 실내안테나 제작업체인 (주)스펙트럼과 (주)이노링크는 저렴한 가격의 신규 제품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시청100%재단은 실내안테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쿠폰을 발행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내안테나 포장 박스 안에 동봉된 반송용 쿠폰을 디지털시청100%재단에 보내면 3,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내안테나는 현재 롯데하이마트와 LG전자, 삼성전자 직영 대리점 등 가전사 매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는 실내안테나만 제대로 설치하면 선명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DTV KOREA는 “도심 아파트의 경우 송·중계소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반사파에 의해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며 “과거 아날로그 전파의 경우 굴절파가 수신되면 TV 화면에 노이즈가 생겼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선명하게 수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시청자가 실내안테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상파 TV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DTV KOREA가 실내안테나 보급 확대를 위해 안테나 제작업체, 디지털시청100%재단과 진행했던 협의 내용을 공식적인 합의서 형식의 문건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단신 뉴스

유익선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학회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6대 학회장으로 유 교수를 정식으로 회장에 임명하는 한편 차기 학회장으로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지난해 11월 학회장에 선출된 유익선 교수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장,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미디어 다양성위원,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의장,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언론중재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정보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또 27대 학회장에 내정된 윤석년 교수는 광주대학교 기획부처장을 역임했으며 광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주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YTN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N-스크린 기반의 다채널 무료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KBS 통합플레이어 K가 올해 말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 KBS는 KBS 통합플레이어 K가 다문화 가정과 한국 문화를 좀 더 알고자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KBS 1TV 채널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KBS는 “전통 번역 인력을 대신해 IT기술인 번역 엔진을 활용함에 따라 다소 번역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작성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S 통합플레이어 K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는 올해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에는 KBS 1TV 채널뿐만 아니라 KBS 2TV채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한

이경재 위원장, “협의된 것 아니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선 긋기?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토론회에 대한 반발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안은 미래부의 것이지 방통위의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만약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부는 방통위와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독단으로 방송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부 등 정부가 합의해서 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당 계획에 대해 “어제 토론회는 미래부가 KISDI에 의뢰해서 나온 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이 위원장이 밝힌대로 해당 방송산업발전 계획안이 미래부 독단으로 제작, 발표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두 정부조직의 불협화음이 그 만큼 상당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이 위원장의 말처럼 방통위가 배제된 미래부만의 단독 안전일 경우 발표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연구반 및 UHD 협의체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11월 14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이 발표된 것을 의아해 하는 기류가 상당했다. 아직 공동연구반 및 협의체에서 확실한 주파수 및 UHD 발전안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14일 계획안에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해당 계획이 미래부만의 단독 안전이라면 의문은 풀린다. 방통위는 공동연구반 및 협의체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 미래부가 먼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공동연구반 및 협의체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발언에도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상임위원들 역시 각각 이야기를 했었지만 종합해서 안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종합적인 결과물에 대

PP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케이블 SO의 결단과 노림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VOD 및 유료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배분되는 케이블 TV 프로그램 사용료를 2014년부터 2012년 대비 4%,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를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누적금액 약 3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는 PP 업계의 요구를 케이블 SO들이 전격 수용한 결과다. 콘텐츠-플랫폼 상생협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PP-SO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수확을 거둔 셈이다. 여기서 프로그램 사용료란 케이블 SO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로부

터 받는 수신료 수익의 일부를 공급자인 PP에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신료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케이블 SO가 PP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대목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케이블 SO들이 클리어캄 TV 및 8VSB 허용 등으로 해택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자초하는 상황에서 케이블 SO의 결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케이블 SO들은 수신료보다 홈쇼핑 송출료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모델에 익숙해지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신료로 속알이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PP에 자신들의 몫 일부를 더 주는 것이다.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하라”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방송인 5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업 방송인 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통합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서명을 제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소속 조직이라면 언론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인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듣는 시능’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대통합위는 만남 자체를 피했고, 해직 언론인 문제를 언론자유와 직결된 사안이 아닌 사업장의 노사 문제로 선을 그으려는 태도마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회적 갈등을 대통합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갈등 해소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국민 대통합위원회조차 귀를 닫고 벽을 높이는 것이 MB정

해서는 미래부만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즉, 방통위와 문체부는 ‘들러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방통위와 문체부가 들러리였다면 14일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박영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참고로 인사말 자리에서 주최측은 방통위 담당자가 국회 일정상 시간을 내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박 국장은 14일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가 방송정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이다. 토론회 인사말의 특성상 인사치레에 무게를 둔다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업’의 의미를 강조했다라는 부분은 이 위원장의 설명과 미묘하게 온도차이를 보인다.

또 토론회에서 강해남 여성민주회 정책위원이 해당 발전계획을 두고 “방통위와 협의된 사항치고는 상당히 유료방송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방송산업발전 계획안 발표 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자 서둘러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을 두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이전투구식 해석을 제각각 남발하며 끝없는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아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이에 일각에서는 케이블 SO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은 단순한 상생-협력의 틀을 벗어난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진단한다. PP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되면 케이블 SO의 수신료 인상도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SO-PP의 동반성장을 노릴 수 있다.

한편 PP협의회의는 케이블 SO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PP-SO 상생협의체를 통해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날 SO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면서 “종편4사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고 단언했다. 또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미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사업자가 아닌 일반PP의 콘텐츠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부와 다르다’던 박근혜 정부의 모습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으며 한광욱 대통합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해직 언론인 문제와 관련해 국민대통합위원회 산하에 방송사·방통위·언론노조·정치권 4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발족하자는 아당 의원의 제안마저 거절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총 22명의 산학연 유관 전문가들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 이후에는 국내 빅데이터 현황 및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 중인데 반해 아직까지 소설 분석에 치중한 파일럿 프로젝트 위주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인력 공급 등이 제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빅데이터는 ICT 업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처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핵심분야”라면서 “ICT 인프라 강국의 이점과 정부3.0의 기회를 활용해 조기에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생태계 전반에서 체계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어 자문위원들에게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정부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 의견 및 제안을 요청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로 인한 창의적 사업화의 어려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빅데이터 사업이 종래의 단순 내부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수사례 적극 발굴 필요 등 고기에 느낀 점들을 토로하고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애널리시스트 포함) 등 창의적 인재양성, 빅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방안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이외의 외국어 자막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하는 2014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설명회가 11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 별관 3층 동강홀(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정보통신분야 산업체, 주요 대학, 민간 교육훈련기관, 자격 검정 업무 관계자 및 응시 대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본사업 설명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발전 방향(정책동향 발표)과 정보통신분야 자격검정사업 추진 성과, 2014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외에도 방송통신중목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개정 추진 동향, 전자파환경관리분야 신규 기술자격 개발 추진 동향을 비롯해 자격검정 수요 증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자격검정 시행계획 관련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가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급부상중인 빅데이터의 국내 산업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로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I 지상파의 UHD 전략을 해부한다(上)

지상파 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을 전제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략, 국민행복 700 플랜이 공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플랜의 상세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을 상－하로 나누어 연재한다.



[도입] 지상파의 UHD-TV 전략, 뼈를 깎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편적 UHD-TV 발전을 전제로 구체적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안을 수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중심의 UHD 구현방안을 토대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플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공개로 플랜2.0'과 대비되는 '국민행복 700 플랜'이다. 해당 플랜은 지상파 방송 4사가 최초로 의견을 취합해 미래부에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행복 700 플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TV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안한 방법은 2개의 안이다. 우선 첫 번째는 698~764MHz를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고 764~774MHz 폭은 보호대역으로 그리고 774~803MHz는 TDD로 묶는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698~724MHz, 752~782MHz를 UHD로 할당하고 724~728MHz, 748~752MHz, 782~783MHz, 803~806MHz는 보호대역으로 묶으며 728~748, 783~803MHz는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이다. 이는 구 방통위의 상하위 20MHz 폭 할당을 전제로 총 54MHz 폭으로 UHD 방송을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정제창 한양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54MHz 폭 지상파 UHD 발전용 할당설과 비슷하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도입기에 해당 주파수 할당을 확정할 후 HD 종로시기가 오면 채널재배치를 통해 470MHz를 하향으로 잡고 54MHz 폭을 UHD로 활용하는 한편 HDTV 종로 후 회수 가능한 주파수를 살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k 도입시기가 오면 470MHz를 하향으로 잡은 UHD 4k 방송을 실시하며 연속적으로 로컬보완 대역과 8k용 대역을 확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주파수는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132~150MHz 폭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방안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에 있어 방통위원장 고시로 정해지지 않은 상하위 40MHz 폭 할당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지상파 UHD 방송이 54MHz 폭으로 가능하다는 논리와 관련이 깊다. 게다가 추가적인 주파수 발굴을 실시해야 한다는 숙제와 더불어 8k 시대가 오면 주파수를 반납한다는 제도적 장치까지 거론되어 있어 일반적인 지상파 UHD 발전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그 의미는 인정받는다 해도 해당 플랜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1. UHD 방송을 꼭 해야 하는 이유

UHD가 세계 방송기술의 새로운 조류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왜 UHD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말의 불안이 상존한다. 실제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미국 FCC를 방문해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내 UHD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폭탄발언을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물론 해당 발언은 귀국 직후 사실상 철회되긴 했지만, UHD를 둘러싼 기술적 논쟁과 더불어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갈린다. 과연, UHD는 새로운 미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UHD는 미디어의 새로운 미디어가 분명하다. 굳이 해외의 사례를 들지 않고 미디어의 진화를 충실하게 따라가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1세대 흑백 TV의 등장 이후 1980년 2세대 컬러 TV의 진화, 2001년 3세대 디지털 TV의 발전은 2013년을 원년으로 하는 UHD의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실감 미디어에 가까운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의 진화가 UHD의 미래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UHD는 보편화의 추세를 기점으로 더욱 날개를 달고 있다. HDTV가 2001년 10,000달러에서 2007년 1,50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LG디스플레이 공시 자료)을 참고해 보자. UHD-TV도 보편화의 흐름을 탄 HDTV와 같은 가격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여기에 캐논 EOS 1DC, 고프로3 등 손쉬운 UHD 촬영장비는 UHD-TV의 보편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실제로 UHD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먼저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UHD 패널 가격 하락 현상을 살펴봐도 UHD 보편화 시나리오에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65인치 기준 UHD 패널 가격이 2013년 1분기에 3.5(풀HD가격 대비 배수)를 기록했지만, 이후 4분기에 1.3(풀HD가격 대비 배수)으로 하락하리라 전망한 전문시장조사기관 '2013 디스플레이 서치'의 발표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여기에 IHS, 유진투자가 전체 시장에서 UHD 비중이 2013년 1.3%에서 2016년 34.9%로 수직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종합하자면 앞으로 UHD는 손쉬운 촬영장비, 실질적인 패널가격의 하락, 시장 점유율 증가를 통해 더욱 보편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기술경쟁과 중국의 가격경쟁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UHD가 절실해지는 부분이다.

2. UHD, 지상파가 답이다

UHD의 발전이 세계 방송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UHD 발전 동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 전략을 구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상파를 외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중심의 UHD-TV는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일부 시청자로 대상을 한정한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가 과연 옳은 일일까? 국민의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답변하자면,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지상파 방송사가 UHD를 주도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의 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막강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

사의 전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생산의 발원지이자 모든 매체의 상수원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KISDI가 TV 콘텐츠 일평균 이용시간을 분석하니 지상파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비지상파 TV를 시청하는 시간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TV 시청 시간 중 실시간 방송은 171분, VOD는 2분인 반면 비지상파 TV 시청 시간 중 실시간 방송은 13분, VOD는 0.3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41명 중 95%에 달하는 6,146명이 일주일 동안 지상파 방송을 시청했다고 답한 부분도 의미심장하다.

조사결과를 UHD로 한정해도 마찬가지다.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21%가 케이블, 11%가 위성방송, 7%가 IPTV, 5%가 게임을 통해 UHD-TV 방송을 시청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무려 56%의 응답자가 지상파를 통해 UHD-TV 방송을 원한다고 밝혔다. 과반수가 넘는 시청자가 무료 보편의 UHD-TV 방송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상파 UHD와 케이블 PP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어떻게? 2012년 방송산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SBS가 채널당 평균 제작비로 2,073억 원을 지출하지만 케이블 PP는 89억 원 수준이다. 또 신규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따져봐도 지상파 방송사가 80%인 반면 케이블 PP는 19%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콘텐츠 공급의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및 독립 제작사 수출규모에 15배에 달하지만 수입 부분에서는 케이블 및 독립 제작사가 지상파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책임지는 지상파 방송사의 막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만약 막강한 콘텐츠 공급 능력을 갖춘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포기당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콘텐츠 시장은 붕괴할 것이며 이에 UHD 서비스는 고가 및 VOD 전용 서비스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시청자들의 UHD 호감도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중국에는 총체적 UHD 시장 붕괴라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상파 UHD 운용에 따른 주파수 자원 효율성 극대화다. 현재 대한민국 방송은 MFN 방식으로 이뤄지며 총 37개 채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식으로 수렴되는 지상파 UHD 방송이 실시되면 SFN 방식의 5개 채널만으로 전격적인 난시청 해소가 가능해진다. 이는 디지털 전송방식과 주파수 효율, 즉 MFN과 SFN의 상관관계에 따른 결과물이다. 여기에 지상파 UHD 방송에 최신 HEVC 코덱(기존 MPEG-2/4보다 압축 효율이 높은 방식)을 접목하면 전송효율이 높아져 기존 DTB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결론적으로 UHD는 지상파 방송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막강한 콘텐츠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고화질은 물론, 기존 ATSC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난시청 해소를 DVB-T2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또 주파수 효율의 측면에서 기존 MFN 방식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SFN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화면 구성 및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지상파, 어떻게 UHD를 할 것인가?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은 과연 어떻게 UHD를 구현할 것인가? 이에 '국민행복 700 플랜'은 밴드플랜 1안과 2안을 제안한다. 1안은 66MHz 폭을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는 것을 전제하는 제안이며 698~764MHz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하고 764~774MHz 대역을 보호대역으로 묶으며 나머지 774~803MHz 대역을 통신에, 나머지 3MHz 폭을 보호대역으로 삼는다.

하지만 국민행복 700 플랜이 중점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은 2안이다. 밴드플랜 2안은 698~722MHz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하고 이후 보호대역, 그리고 728~748MHz 대역은 통신, 이후 4MHz 폭을 다시 보호대역으로 설정하고 752~782MHz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하며 이후 보호대역과 통신대역을 묶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698MHz 대역부터 24MHz 폭, 752MHz 대역부터 30MHz 폭을 지상파에 할당해 총 54MHz 폭(+알파 가능)을 지상파가 배정받게 된다. 기존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40MHz 폭 상하위 '알파기 할당'을 인정하는 전제로 만들어진 밴드플랜이며 가장 현실성 있는 타협안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국민행복 700 플랜은 2안을 전제로 8k 도입까지 총 3단계의 발전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우선 1단계는 UHD 도입기로서 470MHz 대역부터 설정된 HDTV 228MHz 폭과 더불어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총 54MHz 폭을 UHD-TV로 활용한다. 이는 기존 HDTV 대역에서 UHD-TV용 주파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2단계는 HD 종로시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채널재배치를 통해 기존 UHD-TV 용으로 활용하던 54MHz 폭을 698MHz 대역에서 470MHz 대역으로 옮긴다. 이는 HDTV를 종로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를 더욱 발굴한다는 복안도 상존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8k 도입시기로서 채널재배치로 470MHz 대역으로 옮긴 UHD-TV를 정상운용하며 연속적으로 8k 대역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종합하자면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54MHz 폭을 지상파가 UHD-TV로 활용할 수 있으면 향후 HDTV 종로시기에 채널재배치를 통해 UHD-TV(4k)를 470MHz 대역으로 이동하고 연속적으로 8k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이후 지상파는 8k 대역이 활용하고 남은 주파수, 132~150MHz 폭 상당의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행복 700 플랜이 제안하는 밴드플랜 2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54MHz 폭으로 정상적인 지상파 UHD-TV 활용이 가능하냐는 대목이다. 이는 정제창 한양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지상파 UHD-TV 54MHz 폭 활용설'의 연장선상이며 1개의 지상파가 6MHz 폭의 주파수만 있으면 지상파 UHD-TV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섭과 혼신의 영향이 큰 주파수의 특성상 54MHz 폭으로는 지상파 UHD-TV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복 700 플랜이 주장하는 밴드플랜 2안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가장 타협적인 저자세 방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180호 하(下)편으로 이어집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I 통신에게 주파수를 맡겨도 될까? KT 위성 매각 사태로 본 '불안'

KT의 위성 헐값 매각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거진 일종의 해프닝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전락 물자인 위성을 정부의 허가 없이 팔아버린 KT의 수상책은 행동과 단가 후려치기, 위성방송 불협화음, 관제소 넘기기를 비롯해 홈페이지에 거짓이 올라있는 자료를 혼자만 모르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지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여기에 KT가 언론에게 '허위사실을 쓰지 마라'는 압포를 놓으며 뒤로는 정부에 읍소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후안무치는 할 말을 잊게 할 지경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미래부가 KT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KT가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KT의 행위에 기계적으로 분노하기보다는, 미래부의 그릇된 주파수 정책과 KT로 대표되는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지만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통신사에게 과연 주파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주파수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당장 주파수 배분표를 펼쳐보라. 녀망도 이런 녀망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파수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주파수 배분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KT와 SKT, LG유플러스가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 배분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가정하면 주파수 배분표는 당장 초등학교 그림 노트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800~900MHz 대역을 보면 '공백-KT-SKT-LG유플러스-공백-KT-SKT-LG유플러스-공백-KT-공백-KT'순서다. 아주 화려하다. 그만큼 주파수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배분하면서 상황에 맞게 주파수를 조각으로 나누어 통신사에 넘겼기 때문이다.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배분은커녕 그냥 매물로 나오면 넘겨버리는 주파수 정책.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9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사상 초유의 주파수 클리어링 사태가 벌어지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파수를 받는 쪽인 통신사.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통신사들의 광고 카피 내용, 즉 주

파수의 총량이 통신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는 오류를 지적하지는 않겠다. 속도가 모든 통신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 KT 위성 헐값 매각에 숨은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그것은 바로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정당성이다.

물론 통신도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KT 위성 사례를 보면 이 당연한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 보자. KT는 2010년 5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ABS에 매각했지만, 2011년 7월 계약사실을 숨기고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민의 대표인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외국 기업에 내어준 행국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일까.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있어 난시청 해소 및 보편적 UHD-TV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통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미묘하다. 방송은 미국식 전송방식

및 기타 주파수 절대 부족으로 인해 700MHz 대역 주파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통신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과 비교해 보자. 업계 1, 2위를 단숨에 비교하면 미국은 총 21,500만의 가입자와 200MHz 폭을 통신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4,400만 가입자에 290MHz 폭을 통신이 보유하고 있다. 통신의 입장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에 전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통신의 해당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 석연치 않은 이유가 통신비용 원가공개에 얽힌 음모론이 아니라 미래부의 무지와 통신사의 과소한 주파수 할당에 있다는 점이 이번 KT 위성 헐값 매각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다. 통신에 주파수를 할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파수를 외국에 넘겨버리는 통신사의 작태를 감안하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약간의 논리적 지향점이 더해지지 않을까.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 8VSB

8VBS 전송 방식 허용 여부가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는 포장 때문에 언뜻 시청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인데다 저가 콘텐츠 시장 고착화 등 미디어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종편의 그럴싸한 포장과 케이블의 알박한 상술

단어조차 생소한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는 디지털 TV 전송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만이 이 기술을 사용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8VSB 전송 방식이 케이블 방송에도 허용되면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900만 명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600만 명 정도가 별도의 셋톱박스 설치 과정 없이 고화질 방송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합편성채널의 그럴싸한 포장과 케이블 방송의 알박한 상술에 불과하다.

실제로 케이블 방송에 8VBS 전송 방식이 허용되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의무전송채널인 종편이다. 현재 9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은 지상파 채널 외의 다른 모든 채널을 흐릿한 아날로그 화질로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 고화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차이는 확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8VSB 전송 방식이 케이블 방송에 허용되면 종편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고화질 방송으로 송출돼 지상파 방송과 화질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종편이 개국 이후 줄곧 8VBS 전송 방식 허용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8VSB 전송 방식이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는 8VSB 전송 방식이 허용되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으므로 일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8VBS 전송 방식은 고화질 방송만 볼 수 있을 뿐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혜택인 주문형 비디오 시청, 데이터 방송, 양방향 방송 등의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무늬만 디지털 전환인 것이다.

케이블 업계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900만 명이라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실은 뒤로 한 채 고화질 방송만을 앞세워 순식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알박한 상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IPTV 업계 관계자는 “8VBS 전송 방식이 허용되면 아날로그 케이블 시장이 디지털 시장으로 그대로 흡수된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이탈 방지와 새로운 추가 가입자 확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케이블 업계가 8VBS 전송 방식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늬만 디지털 전환은 안 돼”

최근 종편 JTBC의 모회사인 <중앙일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8VBS 전송 방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미래부는 “8VBS 전송 방식 허용 여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중앙일보> 보도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2017년까지 케이블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부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도 일단 모양새는 갖추 수 있는 8VBS 전송 방식을 허용할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디지털 전환)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양방향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진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재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도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투자를 외면하던 케이블 업계에 8VBS 전송 방식을 허용해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유료방송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동시에 디지털 전환의 본

목표인 국민의 공익에도 걸맞지 않는다”면서 “무늬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8VSB의 또 다른 독, 저가 콘텐츠 시장의 고착화”

종편 특혜,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과 함께 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저가 콘텐츠 시장의 고착화다. 장기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파괴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 회장은 “8VSB 전송 방식이 허용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과 비슷한 비용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돼 결국은 저가 콘텐츠 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VSB 전송 방식이 허용된다면 현재 디지털 케이블 상품 가입자들 대다수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으로 옮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고착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고착화 문제는 콘텐츠 투자 감소, 콘텐츠 경쟁력 하락, 콘텐츠 산업의 후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대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 지대로 이뤄진 대만은 지형적 요인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수신이 어려워 방송환경 자체가 케이블 방송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가 시장이 고착화돼 자체 제작보다는 해외 프로그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서 케이블 방송은 손쉽게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 수입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고 이렇다보니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문화주권 실종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미소(28·여)씨는 “요즘 종편을 보더라도 해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케이블도 마찬가지다. 저가 시장이 앞으로 더 고착화된다면 케이블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자체 제작

보다는 저렴한 해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선호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왜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뒤 “한류 등 우리나라 자체 콘텐츠 제작을 더욱 육성해 문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한 뒤 “8VSB 전송방식 허용으로 케이블이 저가의 가입자를 고착화시키면 그 외의 유료방송 IPTV와 위성방송도 이에 준하는 특혜를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공정경쟁구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청자는 양방향 서비스가 안 되는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에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수많은 흡소평 방송을 시청하는 등 여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국민 편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8VSB 전송 방식 허용 여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 산업 더 나아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미래부의 8VSB 전송 방식 허용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직수율 통계의 오류, 문제있다 고무줄 통계 믿을 수 있나



[사진1]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

전쟁이 일어났다. 긴박한 순간, 야전 사령관은 휘하 부대의 진격을 위해 도하작전을 계획한다. 하지만 부대가 도하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심을 파악해야 하는 법이다. 야전 사령관은 부하를 보내 도하 예상지점 3곳의 수심을 측정하도록 지시한다. 결과는 1.2미터, 2.3미터, 2.5미터. 부대가 도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은 2미터고 3곳의 평균치도 2미터다. 야전 사령관은 도하 명령을 내렸고 부대원들은 총 한 번 제대로 봐보지 못하고 70%가 수몰되었다.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릴 야전 사령관은 없을 것이다. 위 상황의 경우 평균이 아닌 최댓값을 산정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의 오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및 통신비 평균 산출도 마찬가지며, 지상파 직접수신을 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직수율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질수록, 많은 전문가들은 낮은 직수율을 문제 삼아 지상파 방송사의 미래를 성급히 재단하곤 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 및 지상파 MMS, UHD-TV 발전도 마찬가지다. 유료방송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상파의 낮은 직수율을 문제 삼아 지상파 플랫폼의 기능을 축소하고 이를 공격하는 상황에 기계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중심에는 직수율 7%라는 수치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를 보자. 해당 조사에 지상파 직수율은 2010년 7.8%, 2011년은 9.0%, 2012년은 7.9%로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항목이 묘하다.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직수율 표에는 ‘지상파만 이용’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즉 지상파만 이용하는 가구가 7.9%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지상파만 이용’이라는 항목은 실제 직수율과 괴리감이 있다. 해당 항목 조사는 말 그대로 직접수신 안테나를 세운 가구만 그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TV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케이블 및 IPTV 등 유료방송과 직접수신을 병행하는 수치가 빠져 있으며 TV가 1대 있더라도 유료방송과 직접수신을 병행하는 수치도 빠져 있다. 후자의 경우 평소에는 직접수신을 통해 TV를 시청하다가 VOD 및 부가 서비스를 즐기고 싶으면 유료방송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가구를 가정한 것이다. 즉, ‘지상파만 이용’이라는 항목은 말 그대로 직수율의 최소평균치만 산출했다는 결론이다.

물론 여기에는 직수율 가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방송사의 낮은 직수환경 제공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36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이 가구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이용 중인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것은 모두 표시합니다.	
① 아날로그 TV(브라운관 TV)	☐ 대
② 디지털 TV	☐ 대
③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	☐ 대
④ 팩스(복합기 포함)	☐ 대
⑤ 인터넷 회선	☐ 대
⑥ 안테나를 통한 TV 시청	☐ 대
⑦ 케이블TV(CATV) 시청	☐ 대
⑧ 위성을 통한 TV 시청	☐ 대
⑨ 인터넷TV(IPTV) 시청	☐ 대
⑩ 해당 없음	☐ 대

[사진2]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설문지

여기서 우리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24일간 대

한민국 전체가구 10%에 달하는 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는 거의 유일한 전수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데이터를 참조해 보자. 조사 당시 DTV KOREA는 방통위에 의뢰해 직수율을 산정한 결과 ‘13.3%’라는 수치가 나왔다.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와 비교해 2배에 육박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상술했자면,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와 같은 ‘안테나만 시청’ 수치는 9.20%, ‘안테나+복합시청’ 수치는 17.70%가 나온 상황에서 복합시청 중 직수율과 관련 없는 가구 수를 배제한 수치가 13.3%라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통계의 오류가 있다. 통계 설문지를 보자. 인구주택 총조사 설문지 36번 항목을 보면 ‘이 가구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이용 중인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아날로그 TV, 디지털 TV, 개인용 컴퓨터, 팩스, 인터넷 회선(이하 보유기기)과 안테나를 통한 시청, 케이블 TV 시청, 위성을 통한 TV 시청, 인터넷 TV 시청, 해당 없음(이하 시청행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직접수신에 해당되는 항목은 ‘안테나를 통한 시청’인데 이 수치가 9.20%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직접수신을 하는 가구가 ‘안테나를 통한 시청’에 잡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진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공식청을 통한 직접수신을 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일일이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수신을 하는 가구가 ‘안테나를 통한 시청’에 체크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9.20%라는 수치도 높아진다. DTV KOREA 및 디지털시청100%재단의 활발한 공식청 지원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연히 방통위가 산정한 직수율 13.3%라는 수치도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안테나+복합시청’의 단순 수치인 17.70%를 기준으로 해당 수치는 상승할 것이며 단순 수치의 가감폭도 좁아질 것이다. 방통위의 계산법, 즉 ‘안테나+복합시청’ 17.70%에서 직접수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13.3%의 간극이 더 좁아진다는 뜻이다.

안테나를 일일이 세운 직수율 가구만 산정한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는 직수율의 최저 평균치로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2012년 7.9%라는 수치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3개의 수치, 즉 안테나만 시청(9.20%), 안테나 복합시청(17.70%), 방통위가 인정한 직수율(13.3%)은 서로 다른 방법 및 복합시청을 포함한 수치의 조정 등으로 더욱 상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직수율은 가정이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20%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서 180만 조사 가구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야 한다. 지역별, 연령별 조사 대상에 따라 직수율은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수신율이 20%에 육박한다고 해서 그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수신을 제고 노력 정당성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97%에 육박하는 디지털 커버리지와 현재 알려진 직수율 데이터가 지나치게 하향평가 되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설명한 야전 사령관처럼 통계의 오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다. 하지만 직수율이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정부와 방송사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것은 아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사진3] DTV KOREA 지상파 디지털 TV 실내안테나 보급 협약식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이 어울리는 분야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방송산업발전 종합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송 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을 방송산업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및 육성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물론 창조경제의 모든 해법을 방송산업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산업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가장 가능성 있는 성장 아이템은 확실하기에,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지나친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UHD 발전의 주체를 유료방송으로 한정된 부분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 미래를 향한 비전의 방송 플랫폼을 추구하겠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송 플랫폼의 발전을 유료방송에 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장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

공의 측면이 뉴미디어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는 더욱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단초는 비단 UHD에서만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방송의 속성을 단순히 성장개발의 한계로 재단하는 모습은 심각한 유감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은, UHD를 포함해 대부분의 방송정책이 지나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물론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확립화된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쟁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서비스 플랫폼의 경쟁으로 해당 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종국적으로 심각한 파열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도 증명하고 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발 이후 많은 유럽인들은 가열찬 경쟁에만 매몰되어 탐욕과 욕심으로 새로운 땅을 피로 물들이지 않았는가. 경쟁은 경쟁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서로를 겨냥한 증오의 불길만 타오

를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양적-질적 성장은 정체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방송은 공공의 영역이 차지하는 파이가 상당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방송의 공공성은 실종되었다. 유료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소외된 부분도 문제다. 공공성의 속성을 가지는 방송을 지나친 산업발전의 낙수효과로 이해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왜곡 미디어의 시대로 접어들 위험이 높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11월 안으로 확정된 안이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안전이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정책결정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만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완화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

런 책임없이 단순히 목을 쥔 고삐를 풀어준다면, 방송시장은 시끄러운 파열음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 방송은 공공의 분야다. 쉽게 민영화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국가와 국민이 대승적인 합의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영역이다.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그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슬아슬한 법의 줄타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통합 방송법을 위시한 새로운 시대의 법안이 등장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그 리스크가 너무 높아 불안하다.

그 어떤 누구도 공공성의 정의만큼 상위에 위치하지 못한다. 악화가 양화를 추구하는 불길한 시나리오가 방송의 역사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또한 방송기술의 원천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재단해 더욱 확실하고 공공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지나친 규제완화는 곧 유료방송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공공의 영역인 방송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맹렬하게 돌진할 것이다. 아무도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재훈 미디어개혁3.0연대 공동대표

지역민방 활성화를 위한 해법

들어가는 말 – 다양한 플랫폼 등장

OBS는 SBS의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일한 독립 지역민영방송사다. OBS의 역사는 iTV로부터 시작된다. 과거 iTV는 개국 이후 재허가 거부로 인한 폐국까지 지역성 구현과 공격적인 채널 편성전략을 유지하며 100% 자체 편성과 제작을 활발히 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과 협소한 방송권역으로 광고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광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iTV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재허가 거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허가취소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경인지역의 시청자, 시민단체, iTV 직원들이 힘을 모아 경인지역 방송 살리기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영안모자를 대주주로 한 OBS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개국 7년차에 접어들어 OBS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효율성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며 독립 지역방송으로도 안정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iTV 같이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대외환경의 불합리와 무관심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고 현재는 지역방송으로서 자생할 수 없는 방송시장의 구조 속에서 자본잠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사라진 iTV와 현재의 OBS를 보면서 지역방송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렵고 힘든 자체편성과 자체제작보다는 중앙의 콘텐츠를 단순 수중계하는 네트워크 방송사로 존재하며 자신의 방송구역을 사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법이었고 지역민방으로서 지역성 구현, 지역발전 공헌, 자체 제작비율 확대, 좋은 콘텐츠 생산 등 지역민방에게 부여된 공적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하고 싶은 말 – 진정한 지역방송은 콘텐츠로...

지역방송을 활성화 시키고 진정으로 지역성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해야 할 일은 매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해야

한다.

첫째, 전파를 통한 지역방송사의 방송권역은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OBS의 경우 서울로의 전파월경을 우려한 중앙 지상파 방송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 등으로 경인지역 방송권역 내에 있는 지역 시청자조차 OBS를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뿐 아니라 국내 모든 방송사들의 방송권역을 봐도 유일하게 OBS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차별 정책이다. 다시 말해 중앙 지상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시하고 독립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이다. 최소한 지역방송사로서 타 방송사와 전파 혼신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민 모두에게 시청이 가능하도록 재조정해야 하며 지역시청자 모두가 전파수신이 가능한 방송 커버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파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 대해 지역방송도 광역화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에서 방송권역은 무의미해졌고 자율시장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모든 매체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역방송에게는 물리적인 방송권역을 적용하여 신생 방송사의 자립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시청자 중 어느 누가 다양한 지역방송을 시청하는데 반대를 할 것인가. 지금은 일일 생활권을 넘어 가까운 해외도 하루에 다녀올 정도로 행동반경이 넓어졌다. 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자기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서도 인천, 경기 충청 등 타 지역방송을 시청하고 싶고 인천에서도 제주도의 소식을 듣고 싶을 것이다. 현재의 지역방송의 방송권역 정책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며 지역방송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방송도 플랫폼을 통한 전국 재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

국 국민은 알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지역방송은 매체 경쟁력이 상승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럼, 지역성 구현은 어떻게 실현할까? 그것은 콘텐츠에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성 구현은 물리적인 방송권역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심사 때 심사하는 지역성 구현 항목이 전부였다. 과연 이것으로 지역성 구현이 실현될까?

스스로 편성하고, 스스로 제작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진정한 지역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방송사의 매체력이 증대되어 중앙 지상파의 일방적인 수중계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지역방송사는 싫든 좋든 자체 편성과 자체 제작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과 연관된 콘텐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게 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출연자, 스태프, 협력사 등을 지역에서 구성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고 적절히 지원한다면 지역성 구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콘텐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로 전파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기회도 만들어 질 것이다.

나오는 말 – 지역방송은 민영인가? 공영인가?

정부는 지역방송에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고 재허가 심사 때 마다 이를 평가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최근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 과정에는 수많은 특혜와 지원이 있었다. 종합편성채널은 말 그대로 공익적, 보편적, 지역적인 방송이 아닌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순수 민영 케이블 TV 방송이다. 이런 방송을 방송 시장에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수

김태우 OBS 경인TV 기획심의팀 부장

많은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도 특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분명 OBS 경인TV에 대한 역차별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모순 투성이다.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이라 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는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법안 내용 중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다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재정건정성 문제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는 지원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정으로 지역성 구현을 위해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 하려면 지역방송사의 자체 편성비율, 자체 제작비율 등의 실적과 지역 공헌도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성 구현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방송장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방송사 별로 차등하여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방송사를 살리기 위한 미디어 랩(Media LAB)의 기본 취지에 걸맞게 결합판매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17.3%(OBS 결합판매비율)라는 단순 수치로 기본에도 맞지 않는 억지 논리를 주장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소 방송사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광고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도 OBS 및 중소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배정하여 균형 잡힌 광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소중히 하고 시청자를 존중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지역방송이 독자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특혜가 아닌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진정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존중되고 시청자 우선주의가 실현되어 전국 어디에서든 지역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 방송기술대상 공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내 방송기술 또는 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방송기술인에게 “2013 방송기술대상”을 수여합니다 “2013 방송기술대상”의 수상자 추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및 포상 대상

-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 방송기술 환경 개선, 업무 개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도입에 공이 큰 회원
- 방송기술인 간 기술정보 교류의 활성화에 공이 큰 회원
- 방송기술인의 자긍심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회원

응모대상

- 각 방송사의 현업에 재직 중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중 각 방송사 기술인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회원
- 각 방송사당 2인 이내 추천
- KBS는 5인 이내, MBC는 3인 이내 추천

시상 내역

대상	1명	상패 및 NAB 2014 참관	2014년 4월 시행
우수상	3명	상패 및 CCBN2014 참관	2014년 3월 시행
격려상	5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특별상	1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별도 선정

심사일정

11월 6일	공고	
11월 6일~11월 26일	추천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11월 27일~12월 6일	심사	순위 결정
12월 12일(목)	시상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4.05.20-23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